

사설

북한산 '관통'은 안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 의곡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 재 조정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진다. 국무 총리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으며,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선의 최종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의 몫이 되었다.

서울의곡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노선이 처음 검토되던 87년경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이어 공사가 착공되자 불교계가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러니까 서울의곡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을 둘러싸고 1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는 결론을 내리야 할 시기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인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노선재검토위원회 위

원들의 다수도 북한산 관통노선은 안 된다든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로 건설은 도로기술자들이 주도함으로써 도로공학자 측면만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산은 도로로 허물어지고 강은 물길을 바꾸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매년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가옥과 농경지의 침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환경정책 부재, 녹색 선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개발을 하되 보전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가능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국무총리실은 북한산 관통노선을 폐기함으로써 국민들과 불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주금 공개는 사원경제의 초석

최근 대구 파계사가 설립된 낙성법회에서 불사비용 시주자 명단과 금액, 사업비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사찰의 목적사업에 동참한 시주자의 명단과 시주금액 그리고 그 사용처를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공개하는 것은 지당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신자들에게 비쳤던 것은 사찰의 불사비용 공개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찰 운영과 관련된 재정활동 내역이 공개되는 예도 그리 흔치 않다. 때문에 사찰 운영의 재정적 투명성이 전제 되지 않고는 승단과 재가 사이의 화합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다만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사보나 회보 등을 통해 시주

금을 낸 신도 명단이 공개되고 월별 혹은 연도별로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일 목적 사업을 위한 시주금 기금 등의 일반 시주금 시주자의 마음은 순수하다. 물론 시주금이 증생에 기여하는 사찰의 자세도 정정하다. 이 시주자와 사찰의 순수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비리로 이어지고 '지탄 받는 불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사 내역의 공개는 청정한 재물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찰과 신도 간 신뢰의 표현이고 불사의 원력이 바르게 회향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사 내역을 공개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나아가 사찰 재정 일체를 공개하는 사찰이 늘어날 때 불교 경제도 바르게 정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인쇄인 : 유승삼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대표전화 02-737-8881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 추진

현행법 재산·환경·자율권 침해소지

현고스님, 문화재청 확대개편 등 6가지 제시

전통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계종이 '사찰 문화재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일 서울 법원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사찰의 재산권과 환경권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 문화재 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고스님이 개선 및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 △문화재위원회 개편 △사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의 소유자 주권원칙 △전통사찰

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통합한 사찰문화재 보호법 입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체제 개선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 모두 6가지다.

조계종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개선안 통보 및 이행철저'라는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사찰의 재산권과 자율권 침해, 수행환경 훼손,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문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수

시 지자체가 공사를 주도해 실시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있다.

현고스님이 제시한 대응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문화재청에 이관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지자체에 의해 문화재 보수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는 사찰과 성보적 개념의 사찰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계종은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에는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과 문화재청 내 문화재 기술국 및 사찰문화재과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사찰문화재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체제 개선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나 군이 직접 발주하거나 직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과 '출입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재 분야별 또는 종합적으로 전문가 조함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보수와 정비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화재청에 전통문화기능 학교를 설치해 분야별 문화재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권역별로 25일까지 열려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가 권역별로 25일까지 중앙승가대서 열린다.

권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열린 연수 장소를 종합대학인 중앙승가대로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문화재 보수사찰의 불사와 국고보조금' '신도조직의 사례 분석을 통한 모범 사찰 만들기' '남북 교류와 통일' 등의 강의와 '포교원 정책 특강' '사찰 홍보방안에 대한 안내' '종무행정안내' 등의 일정으로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권역별 일정을 보면, 지난 3-4일 서울·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제주권(7-8일) 연수를 마쳤으며 대구·경북권은 10-11일, 부산·경남권 15-16일, 광주·호남권은 24-25일 열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고속철노선 재검토위 활동시한 놓고

정부·시민종교대책위 마찰

금강산, 천선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 노선 재검토위원회가 2차 활동 시한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종교대책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민종교대책위가 4주로 잡정 결정된 추가 활동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대구-부산간 직선노선을 추가할 것을 요

구하면서 표면화했다.

이 같은 시민종교대책위의 주장은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시민종교대책위는 "현장 답사만 해도 최소 3-4주가 필요하고, 자료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면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

했다. 기한이 제한될 경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안 노선검토위 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시민종교대책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경주-부산간 노선을 검토하는 재검토위의 입장을 정부가 충분히 존중하는 만큼 재검토위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재검토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원칙을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프간 바미안계곡

세계 문화유산 등재

2001년 3월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대불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계곡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6월 30일 파리에서 개막된 세계유산위원회 제27차 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아프가니스탄의 구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고대 불상들이 있는 바미안 계곡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고의적인 불상 파괴와 같은 지극히 편

협한 행위들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중부 힌두쿠시 산맥 3km에 걸친 절벽에 2000여 개의 석굴이 뿔뿔이 뿜어낸 바미안 계곡은 기원전·후·5세기 꽃핀 간다라 불교미술의 중심지로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 중 하나다. 권형진 기자

31대총책과제 의문제기

영담스님, 재원 조달 등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영담스님이 지난 6월3일 총무원장 법정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31대 총책과제 및 중점 총책과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담스님은 3일 기자회견에서 "31대 총책과제 가운데 재원조달, 각종 기금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담스님은 △최소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중앙연수원, 상설행차교육원, 전통불교문화센터, 불교종합복지센터 등 4대 불사의 2006년 마무리는 무리한 계획이며 △승려노후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조성도 중단 형편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연수원설립추진위원회 등 현재 계획 중인 15개의 각종 위원회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승가학원 이사추천, 원택스님에 위임

동국학원 감사후보 보선·범여스님

종합학교관리위원회는 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8월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타스님 등 5명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에 대한 후보추천권을 종합학교관리위원장 원택스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동국학원 감사 후보에는 보선(중앙총회 수

석부의장) 범여(선운사 주지)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승가대 김포화사 건립시 5억 여원의 설계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하도록 승가학원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유주·무주 고향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항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

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동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산 011-855-8741(부산산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